

# 카지노바 '성업중'...단속은 '휴업중'

## 유행처럼 번지는 카지노바 가보니

지난 주말,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술집을 찾아갔다. 간판에 카드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 도박 용어가 적힌 간판을 빼고 외양만 보면 주위 술집과 다를 게 없다.

여자종업원이 "게임하러 오셨나, 해보셨나"고 묻더니 한쪽으로 데려가 참가자 명단에 적고 1인당 10만원을 선불로 받는다. 그만큼 집을 나눠주더니 손님 8명을 한 테이블로 모아 게임을 시작했다. 업소 종업원은 "코로나 전만 해도 4개 테이블이 모두 찼고 밖에 대기열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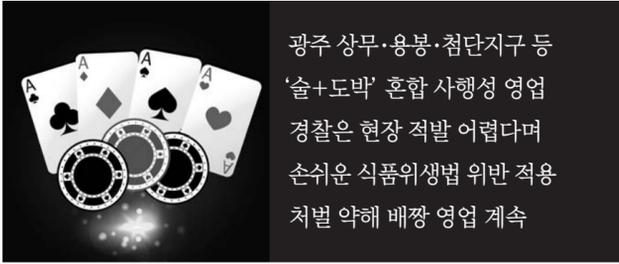
집을 모두 잃은 손님들이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총전해 게임에 다시 참여했다. 1게임당 한 번에 최대 20만원까지 총전이 가능했다. 한 번 게임에 200만원까지 판 돈이 올랐다. 집은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인근 다른 업소도 비슷했다. 이 업소는 남성과 여성 1인당 6만원씩의 '입장료'를 선불로 받는다.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카지노' 형태의 술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데다, 행정기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광주서부경찰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카지노 형태의 신종 업체가 광주시 상무지구와 용봉동, 첨단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홀덤 등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한 것이 특징으로, 술과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는 별도 판매하며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6~10만원의 참가비로 집을 교환해야 한다.



광주 상무·용봉·첨단지구 등 '술+도박' 혼합 사행성 영업 경찰은 현장 적발 어렵다며 손쉬운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처벌 약해 배짱 영업 계속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카지노 형태의 술집을 찾은 손님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고 있다.

현행법(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행행위가 아니라며 경찰도 집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

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껏 단속하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다.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바'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으로, 홀덤·바카라 등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지는 것이다.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하지만 현재로는 변칙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이 때문에 올 들어 카지노 형태의 일반음식점 6곳(18건)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만 입건(광주일보 10월 16일 6면), 서구청에 통보했다.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등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증했다. 업소당 많은 곳은 7건, 평균 3회 이상 적발됐지만 문을 닫은 곳은 없다는 게 구청측 설명이다. 오히려 도심 곳곳에 전단지들을 뿌려대며 적극적인 손님 끌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카지노바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의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게임기 철거나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박관리문제센터 광주전남센터 관계자는 "홀덤 등을 하는 카지노바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이라며 "홀덤바 뿐만 아니라 성인 오락실 등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규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입증에 어려운 탓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 음주운전 판결 2제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5개 혐의 '징역 2년 3개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루에 5개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지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3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

조지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A씨에게는 이날 하루 도주지상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에도, 범행 동기·경위·정황 등을 반영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유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 집유기간 사고·재판 중 무면허 운전 '징역 8개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운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광산구 수동로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40대 남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刑)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원인에 막말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광주고용청 근로감독관들 비위 잇따라

### 3년동안 6명 징계 받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 현장을 감독, 개선해야 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갑)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6명(직무상 2건, 직무 외 4건)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징계 사유로는 광주청 7급 근로감독관은 지난 2017년 12월, 근무처에서 담당자 변경을 요구하는 민

원인에게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며 막말을 했다가 2년 뒤인 지난해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청 5급 근로감독관은 혈중알콜농도 0.14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면허 취소 뒤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광주청 6급 근로감독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견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반장에게 시험 출제방향 알려준 고교 영어 교사 해임

### 도교육청, 교장 등 주의 조치 검토

특정 학생에게 사실상 시험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한 고교 영어 교사에게 교육 당국이 해임 결정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 모 고교 3학년 영어담당 교사 A(47)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사실상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A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향후 주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반장 B양을 진학실로 불러 A4용지 1장을 건넸다. A4용지에는 영어 교사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작성한 시험문제 근거, 방향, 내용 등이 담겼다.

B양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B양은 기말고사 후 A4용지를 생활 과학책에 넣어두었는데 생활 과학책을 빌린 친구에게 A4용지가 발각되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건넨 내용만 보면 시험문제를 유출할 수 있다"며 "B양의 기말고사 영어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양의 영어성적은 1학년 1학기 1등급, 1학년 2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2학기 1등급, 3학년 중간고사 100점을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A 교사는 시험 근거 등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